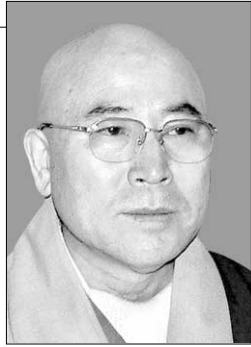


“안정·화합 바탕 신뢰받는 종단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중하·법장스님에게 듣는다



중하스님

총무원 직제 재검토·총무회의 기능 강화
북한산 금정산 관동도로 백지화 주력
한국불교 알릴 국제 불교교류 기구 창설

해 해외포교를 활성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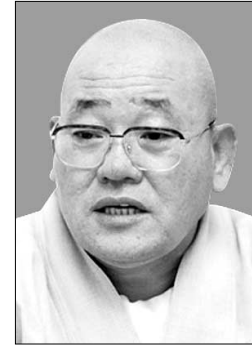
7. 종단 인פק에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원칙을 갖고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다. 사면을 한다 해도 일괄적 사면이 아닌 선별적 사면이 좋다고 생각한다.

8. 한국불교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일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박물관 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다. 재검토 여력이 높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

9. 종단차원에서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본과 평불협이 북한불교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 한 종단에서 두 단체는 곤란하다.

10. 대통령이 종교색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조각사 대통령을 면담해 형평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법장스님

권한 대폭이양... 주지 임명권 본사주지에
대정부대책위 구성 문화재보호법 등 처리
열린불교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강구

1. 사회는 변하는데 종단은 그렇지 못했다. 승가 사회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화합과 안정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행정과 대사회적 활동 경험을 통해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고 싶다.

2. 통일문제나 환경문제는 전문가들에 맡겨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총무원장의 권한도 각 부서장에게 대폭 주어야 한다. 다만 책임을 철저히 불어야 한다.

총무원장이 되면 말사 주지 임명권도 본사주지에게 이양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이 활성화된다.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3. 조직은 능력이 최우선이다. 능력 위주로 조직이 강화될 때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 인사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지역과 계파를 배제하고 능력위주로 인사를 할 것이다. 과거에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을

지냈던 원로들을 모시고 충분히 자문을 구할 생각이다.

4. 일반인도 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심하고 신심을 증장시킬 수 있는 수행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신도와 스님, 선과 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얼마전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와 만나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노 당선자의 답변을 전해 들었다. 총무원장이 되면 대정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등 모든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6. 성보문화제는 정신적 물질적 문화를 겸비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또 종단은 물론 정부시책 차원에서 정보화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불교가 세계인류에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정보센터와 수행관을 만드는 등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7. 종정스님과 종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종도들의 뜻을 수렴해 화합속에 미래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공생과 상생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하겠다.

8.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더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다.

9. 북한불교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총무원이 다 관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법타스님이 오래전부터 통일문제에 관여해 왔는데, 이 분이 주도하게 하고 총무원은 후원하는 방식으로 북한불교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0. 문광부 장관은 최소한 무종교인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강력히 주문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불화와 시비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명우 기자 mwhean@buddhapia.com

계파·금권 등 구태 청산돼야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풀어야 할 과제

24일 실시되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역대 어느 총무원장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부합해야 한다는 코앞에 놓인 과제를 푸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든 중요하지만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하다. 이번 선거의 과정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0년을 내다보는 포석으로서의 진전이나 아니면 퇴보나 하는 갈림길에 선 것이다.

자기변신의 기회이자 21세기 불교의 바로미터가 될 이번 선거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공명선거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역대 총무원장 선거의 대부분은 문종과 계파간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타락과 부정선거의 구태를 벗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금권선거가 판을 쳤고, 결국엔 '문종'과 '돈'이 당락을 좌우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일단 현재까지는 별다른 잡음이 없다. 종하, 법장 두 후보가 공명선거를 약속했고, 또 문종이나 각 계파들도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단 24개 교구에서 선출하는 24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과 절차가 종범에 명시돼 있지 않아, 문종과 교구본사 주지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잠복돼 있다.

또한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법규정이 미비해 있다는 점도 걱정스런 부분이다. 총

무원장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명시된 5개 조항이 전부고, 게다가 선거일정이나 금품수수, 인신공격 등을 금지하는 원칙적인 사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런 구속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선거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문종과 계파간의 줄서기가 본격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비방전과 금권선거가 난무하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타락선거를 막을 수 없다.

●총무원장 막강 권력이 훈탁 부른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권력은 한마디로 무소불위나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산중총회에서 선출되고 총무원 내에서는 총무회의가 공의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총무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또 종회도 견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전과

법규정 허술... 문종·계파입김 가능성 총무원장 권한축소 제도적 장치 필요

향으로 불매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다. 출마를 공식선언한지 일주일도 지났음에도 대략적인 기조 외에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두 후보 측은 선거법상 후보등록 이전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매체를 통한 광고 외에 정책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두 후보 측이 아직까지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애매한 선거법 탓도 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또 하나

같은 막강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고 한다. 일리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총무원장은 사실상 종단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쥐고 있다. 조계사 보문사 선본사 본은사 도선사 등 직역 및 직할사찰의 경우 주지 임명권을 물론 예산승인권 및 예산조정권을 가진다. 말사의 주지 임명권도 총무원장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총무행정의 수반으로서 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은 물론 총합의 제안권 등 지지 않는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역대 총무원장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인 것도 바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해 '투자한 것보다 몇 배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할'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명하고 축제 분위기의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 아울러 총무원장 본인의 임무인 종단 행정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



현각 스님(조계종 전 종회의원)

도덕성·급변사회 지도력 갖춰야

조계종 단은 한국불교 1600년의 전통과 정통성을 계승하고 대표하는 종단이다. 따라서 종단의 수장이 되는 총무원장은 도덕성과 신뢰성, 종단운영 능력을 함께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번 총무원장에 선출되는 분은 첫째 종교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품성과 수행을 겸비하여 국민과 종도들의 귀의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존경

할 인물이 없다는 국민들의 자괴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1000만 불자와 12,000여 명 조계종 승려, 3000여 조계종 사찰의 대표로서 경영능력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역사적 산물이다.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의 요인에는 지도자의 능력과 철학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불교정신을 토대로 한 총칙의 실천자이어야 한다. 불교의 이념으로 시행되는 크고 작은 불사나 행사들이 불교정신을 외면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시형작용을 해서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는 보살의 실천적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총무원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어려움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종도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간다면 국민과 종도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단이 될 것이다.

이번 총무원장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열린 마당 이런 총무원장 바란다

손혁재(재가연대 집행위원장)

남혜정(주부·서울 송파구)

미래지향 종무·화합 이를 인물

새로운 총무원장 스님은 세 시대 불교의 기초를 뒤야 한다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예부터 중 벼슬은 담벼슬보다도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날 권위주의정권과 손잡고 중 벼슬에 집착하던 권승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에 맞서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있었고, 마침내 개혁불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혁불사로 한국불교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었다. 올바른 개혁불사는 한국불교 전반에 수행의 기풍과 계율이 뿌리를 내리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쌓였던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개혁불사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게 겪었고, 개혁불사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혁불사를 마무리하고 불교가 불자들에게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개혁 과도기를 거쳤던 전임 총무원장의 소임이 흔들리는 종단을 바로잡는 것이었다면 차기 총무원장은 미래를 내다보는 총무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총무원장은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불교의 화합(조계종 내부의 화합, 종단끼리의 화합, 계파와 승가의 화합)을 이룰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타종교와의 화합, 그리고 사회와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총무원장이었으면 좋겠다. 계율에 엄격하고 수행에 정진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조건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변화'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구태연한 생각과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선이 끝난 후 변화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변화의 기운을 불교계라고 해서 내 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밝히는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다종교사회라 해도 전통 문화의 뿌리는 불교에 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조계종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다. 따라서 그 행정의 수장인 총무원장 역시 당연히 불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기는커녕 윤각사의 '중심'인 듯한 인상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펼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새천년 처음 밝히는 총무원장은 부끄럽지 않은, 참다운 종교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게 불자로서 한 바람이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장점은 수행 전통에 있다. 수행은 철저한 지계 정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총무원장에게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수행 전통을 굳건히 세웠으면 하는 것이다. 불교계의 변화는 스님들이 승가 본연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그럴 때 불자들을 역시 진정한 외호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